

## ‘문재인·노무현’ 사용 금지...與 호남 후보들 ‘발동동’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적합도 조사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후보 경력에 사용할 수 없게 되면서 후보자들의 고민이 커졌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과도적 지지율을 보이는 광주·전남지역의 민주당 후보들은 당장 대체할 경력을 찾느라 비상이다. 30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남 회의록을 열어 청와대 출신 후보는 경력 6개월 이상일 때만 행정관, 비서관 등 직함을 사용하고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등 대통령의 이름 사용은 불허하기로 결정했다. 최고위원회도 이날 오전 회의에서 '대통령 이름 사용 불허'로 의견을 모아 공관위에 권고했다.

공천적합도 여론조사서 대통령 이름 사용 불허  
지지율 큰 격차 예상돼 대체경력 찾느라 골머리

이근형 공관위 간사는 “후보자 심사를 위한 ‘후보적합도’ 여론조사 경력은 이미 공모를 통해 6개월 이상의 2가지 경력을 표기하도록 공고해 접수된 바 있다”며 “제출된 경력이 요구된 조건에 맞는지 현재 검토작업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중 몇 개 경력을 사용할지(1개 또는 2개), 해당 경력을 어떤 방식으로 소개할지는 여론조사 소위에서 실무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조사방식은 실제 경선시 사용될 후보자 경력 소개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공천신청자 접수를 마친 공관위는 향후 정채성(15%)·기여도(10%)·의정활동능력(10%)·도

덕성(15%)·공천적합도조사(40%)·면접(10%) 기준으로 심사한다. 공천 심사서서 해당 지역구내 1·2위 후보 간에 총점 30점 이상 또는 공천적합도 수치가 20% 이상 차이가 벌어지면 단수공천이 가능하다. 후보들은 심사 기준에서 가장 비중이 큰 공천적합도조사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 심장부로 불리는 호남의 경우 전·현직 대통령 직함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 지지율 편차가 커 후보들은 대책 마련에 골몰하는 모습이다. 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보면 광주는 20명 중 17명(85%), 전남은

36명 중 16명(44.4%)이 대통령의 이름이 들어간 경력을 직함에 사용하고 있다. 현 정부 고위직을 포함해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문재인 대통령후보 선대위원장’ 등 상당수 후보들이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들어간 직함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기관 출신 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직함 사용에도 담당하다. 광주는 민형배 전 사회정책비서관과 박시종 전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 전진숙 전 제도개선비서관실 행정관, 윤영덕 전 민정수석실 행정관, 조오섭 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대변인 겸 소통기획관 등이 해당한다. 전남은 신정훈 전 농어업비서관, 권항엽 전 균형인사비서관, 백재욱 전 사회혁신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청와대 출신이다. 하지만 그밖의 후보들은 문재인

대통령 직속 00 위원이라는 이름뿐인 직함을 쓰거나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후보 광주선대위원장’ 등 대통령 후보 시절 직함까지 끌어다 쓴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 직함을 사용하지 못하고 경력도 6개월 이상으로 제한하다 보니 예비후보들 대부분이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여기에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시절까지 포함하면 대다수 후보들이 ‘전·현직 대통령 이름 불허’로 타격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예비후보자는 “공천 심사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결정에 당황스럽다”며 “곧 실시될 공천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를 대체할 적절한 직함을 찾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공천심사에는 광주 8개 선거구에 19명, 전남 10개 선거구에 36명, 합평군수 보궐선거에 4명의 후보가 접수했다. 신봉우 기자

### 전남도, 해수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선정

신안 지도에 400억 투입 해삼·새우 양식기술 개발

전남도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2020년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공모 결과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은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노동집약적 재래식 양식에서 벗어나 미래 양식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첨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 대규모 공모사업이다. 전남도는 이번 공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신안군 지도읍 자동리 일원에 사업비 400억원을 투입, 2022년까지 고소득 어종인 해삼·새우 스마트 양식기술 개발 및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한 민

간 주도형 테스트베드 조성(300억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주도형 양식·가공·유통·수출단지 및 종자·사료·기자재, R&D, 창업교육, 인력양성 등 연관시설 구축을 위한 배후부지 기반조성(100억원) 사업도 병행 추진된다. 그동안 전남도는 양식산업 발전을 위해 신안군 및 어업인, 종자·사료 등 참여 업체와 전문가 등이 함께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사업계획을 수립해 공모 사업을 준비해 왔다. 특히, 공모 사업의 전제 조건인 적합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해수 취·배수가 용이한 대규모 부지를 대상으로 사전 행정절차

및 인허가 사항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거쳐 지도읍 자동리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뽑았다. 이와 함께 지방비 확보 및 자부담 능력을 갖춘 민간 특수목적 법인을 모집·구성해 법인 등기를 완료했으며, 신안군 대표 양식 품종인 새우와 미래양식 품종인 해삼을 전략 품종으로 결정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 선정은 전남도와 신안군, 어업인 등이 열정을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라며 “앞으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의 성공적 추진으로 대한민국 양식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고, 성장하는 기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성은 기자



원도해양경찰서가 29일 오전 전동부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지진안전시설물, 시민 눈으로 확인한다

광주시, 인증 사업 추진

광주시는 민간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촉진하기 위한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건축주나 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고 그 결과를 첨부해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전문인증기관(한국시설안전공단 내진보강지원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광주시는 신청 대상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심의를 거쳐 인증서와 함께 건물에 부착할 수 있는 ‘인증명판’을 발급한다. 또 민간건축물 소유자에게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비용(최대 3000만원)과 인증수수료(최대 500만원)를 최대 90% 지원한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 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이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자본권력의 횡포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독자생존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작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 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된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